

---

# 재난갈등의 분석과 갈등관리 전략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Disaster Conflict and Strategies of Conflict Management

#### -Focusing on Case of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

박태순\*, 양기근\*\*  
사회갈등연구소\*,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부\*\*

Tae-Soon Park(parkts@socon.or.kr)\*, Gi-Geun Yang(withgg@wku.ac.kr)\*\*

---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재난이후 재난지역의 갈등의 전개 과정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갈등의 해결 전략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사회 갈등구조의 변화분석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최근 재난으로 인한 재난지역의 갈등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등 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매년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이 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사례에서와 같은 재난지역내의 많은 갈등이 동반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사례 갈등분석을 통하여, 이제 재난갈등도 우리사회의 여러 갈등 분석의 중요한 측면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지적하면서 그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 재난 | 갈등 | 재난갈등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nalysis of disaster conflict and strategies of Conflict Management based on Case of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For accomplishing the purpose, we analyzed process and features of conflict in area of Taeon after disaster. When we overview literature study about conflict research of Korea society, we know that we have no studying disaster conflict in spite of important cause of regional society conflict. Recently, we have been experienced major disaster every year. When disaster such as Case of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occurred, it is accompanied with a conflict in disaster area. So, we argue that it is important to analyze disaster conflict and propose strategies of Conflict Management.

■ keyword : |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 Disaster | Conflict | Disaster Conflict |

---

## I. 서론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생활의 일부이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든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 또한 한정된 재화나 서비스를 놓고 상

---

\* 본 논문은 (재)희망제작소의 2008년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의 내용 중 일부로 2008 태안국제환경포럼 초청세미나와 2009년 2월 부산·경남지방자치학회에서 발표를 통하여 수정·보완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혀둡니다. 발표와 심사과정에서 좋은 토론과 심사를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접수번호 : #090803-007

접수일자 : 2009년 08월 03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9월 09일

교신저자 : 양기근, e-mail : withgg@wku.ac.kr

대와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원하는 원하지 않던 갈등상황에 놓이지 않을 수 없다. 갈등은 보통 의견이나 이해 대립에 의해 시작되고, 갈등이 진행되면서 상대에 대한 비난과 분노를 동반하게 된다.

그러나 갈등의 그 결과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갈등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도 한다. 개인도 그렇듯이 사회도 마찬가지다. 갈등을 통해 잠복해 있던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논의가 시작되며,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다. 갈등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서로에게 신뢰를 주어 전보다 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여 갈등이 언제나 바람직한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의 갈등은 천문학적인 자원과 사회적 에너지를 소진하고, 관계가 악화되고 불신이 팽배하여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로 후퇴시키기도 한다. 이런 위험이 사람들에게 갈등에 대한 공포를 일으킨다[1].

그렇다면, 무엇이 이처럼 갈등의 결과를 다르게 낳는가?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을 겪고 있는 갈등의 당사자인 사람들에게 있다. 갈등 상황에 있는 주체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갈등의 결과는 사회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 있고, 파국으로 가는 외딴길이 될 수도 있다.

최근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상황의 연속선상에 있다. 물론 갈등의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하고 갈등이 없는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갈등현상에 관한 이해와 성찰적 태도를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실제적인 차원에서 보다 의미 있는 연구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좋은 사례는 재난상황에서의 갈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재난 상황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서로의 협력을 통하여 갈등을 극복할 수도 있지만, 한정된 자원을 놓고 치열한 갈등을 동반할 수도 있다[2].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는 사고지역을 갈등의 상황 속으로 몰고 갔다. 오랫동안 걸쳐 삶을 유지해오던 생활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뿐만 아니라 정부

와 지역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재난이후 재난지역의 갈등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갈등의 해결 전략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 1. 갈등의 개념과 연구 흐름

갈등(conflict)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복수의 이해당사자들이 혹은 갈등당사자들이 희소한 가치나 자원에 대한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하며 대치하는 상황 [3]이다. 즉, 갈등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행위주체 간의 적대적 관계 및 적대적 행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개념이다[4].

한편 갈등의 유형은 갈등발생의 원인이나 쟁점, 갈등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갈등의 유형과 영역을 보면, 심리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내면으로부터 국가를 넘어서 종교, 이념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실제로 갈등분석은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등 많은 사회과학 분과학문의 연구대상이다.

표 1. 학문분야별 갈등연구의 내용

구분	분야	개념
갈등 분석의 학문 분야	심리학	특정 개인에게 복수의 세력이 적용하는 상황에서 한쪽을 포기해야할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심리상태로 정신 질환과 탈산 등에 응용
	사회학	실제적 갈등: 최소가치의 획득을 위한 상대편과 투쟁 비실제적 갈등: 공격하고자 하는 충동
	경제학	경제적 희소자원을 서로 경쟁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행정학 (정책학)	개인, 집단, 조직 내부 또는 이들 상호 간에 나타나는 대립적 상호작용으로 권력 등의 희소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경쟁적 집단 간의 투쟁

자료: [5]에서 인용.

갈등연구의 양대 축은 심리학과 사회학이라 할 수 있다. 심리학은 인간내면의 심리특성에 맞춰 갈등을 논한다. 반면, 사회학은 주로 집단과 집단 간 이해관계에 초

점을 맞춰 갈등을 설명한다. 심리학에서는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동기유발 즉 개인내면에서의 양립될 수 없는 반응적 경향을 분석하는 반면, 사회학은 신분이나 권력 혹은 희소자원 등과 같은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상호간 나타나는 적대적 관계와 그 결과로서의 대립과 투쟁에 초점을 맞춘다[4].

2. 갈등구조의 변화와 재난발생 현황

사례연구로서 개별 갈등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기법과 모형은 다양하다. 사례연구는 변수설정을 통해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설명적 접근 대신 사회현상에 대한 탐색적 접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6], 이해관계자간 갈등의 쟁점과 갈등의 원인 분석을 위한 모형들은 갈등의 구조 및 원인, 이해관계자, 쟁점, 맥락 등을 분석하기에 용이한 질적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다[7].

사회갈등은 그 사회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갈등은 매우 고유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4]. 정건화[4]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사회 갈등의 역사적 유형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는 이념갈등과 정치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주된 갈등이었다. 둘째, 1980년대 후반 민주화 과정에서는 특히 노사갈등 등 계급, 계층적 갈등이 격화되고, 경제적 성과에 대한 재분배요구가 분배갈등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셋째, 1990년대 이후 사회갈등의 쟁점과 영역은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표 2. 한국사회 갈등구조의 변화

시기	1980년대 중반이전	1980년대 중반~1990년대	2000년 이후
갈등의 표출	갈등잠복, 갈등억압	갈등의 폭발적 표출	갈등의 일상화, 현재화
갈등의 영역	국가-정치영역	시장-경제영역	사회-시민사회영역
갈등의 형태	정치갈등, 이념갈등 (냉전-분단체제, 권위주의 정부)	경제갈등, 분배갈등 (성장드라이브, 재벌체제)	복합갈등, 다원적갈등(노동, 복지, 환경, 세대갈등, 재난갈등 등)
갈등의 결과	정치체제의 주기적 위기(체제유지비용의 누적적 증가-정치체제의 민주화)	정치, 경제적 민주화, 사회의 분배구조 개선(임금상승과 대등한 노사관계)	시스템효율성 저하, 신뢰의 부재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 효율성 저하

자료: [4] 수정 인용.

우리사회 갈등의 영역, 표출형태, 내용 등을 시기적으로 구분해서 요약 한 것이 위의 [표 2]이다. 한국사회의 갈등은 초기에는 정치, 국가영역에 국한되었으나, 경제 성장과 민주화에 따라 점차 시장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시민사회 영역을 포함한 전체 영역에 걸친 복합갈등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8].

그러나 이러한 한국사회 갈등구조의 변화분석에는 재난으로 인한 재난지역의 갈등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매년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해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재난이 발생하면, 이 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사례에서와 같은 재난지역내의 많은 갈등이 동반된다. 이제 이러한 재난 갈등도 우리사회의 갈등 분석의 중요한 한 측면으로 다루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2007년 재난연감에 의하면, 2007년도에 발생한 재난은 총 272,090건으로 351,657명의 인명피해(사망 7,849명, 부상 343,808명)와 7,13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2006년 대비 발생건수는 5.9%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9].

표 3. 최근 재난발생 현황 (2006-2007)

구분	계	화재	산불	붕괴	폭발	도로교통	환경오염	유도선	해난	기타	
2005 발생건수	1,763	32,340	516	68	67	214,171	59	0	798	9,259	
2006 발생건수	256,992	31,778	369	55	86	213,745	52	1	845	10,061	
2007	발생건수(건)	12,804	47,882	418	73	90	211,662	50	3	978	10,934
	인명피해(명)	7,470	2,459	9	110	166	342,072	0	20	70	6,751
	재산피해(백만원)	440,964	248,417	377	5,709	1,278	0	0	0	17,655	440,316

자료: [9]에서 인용.

3. 재난갈등 연구의 함의

본 논문은 기존의 갈등이론의 연장선상에서 재난갈등을 주요한 우리사회의 갈등의 하나로 연구하고 있다

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특히, 재난지역의 재난갈등이 성공적으로 봉합되지 못한다면, 물리적 재난복구가 완료되더라도 재난지역의 사회적 갈등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난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08년 12월을 기점으로 2007년 12월 7일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재난복구가 완료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재난지역은 아래의 사례에서 보듯이 오늘도 심한 재난갈등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가장 피해가 컸던 태안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대표적인 갈등으로 볼 수 있는 통합 대책위 구성을 둘러싼 수산과 비수산 간의 갈등사례를 분석하였다.

### III. 재난 갈등 사례 분석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갈등 사례

#### 1.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개요

2007년 12월 7일 07시 06분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소속의 예인선 삼성 T-5호(292톤)로 예인 중이던 해상크레인 부선 삼성1호(11,828톤)가 강풍에 로프가 절단되면서 대산항 입항을 위해 정박 중이던 홍콩 선적의 허베이 스피리트(Herbei Spirit, 146,848톤급)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유조선의 원유탱크에 3개의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적재 중이던 원유 263,00 kl 가운데 12,547 kl가 유출되었다. 이 사고로 서산 가로림만에서 태안 안면읍 내파수도에 이르는 연안 해안선 167km가 기름으로 오염되었으며, 연안조류에 의해 전남지역까지 타르불이 확산되었다. 2008년 1월 현재 충남지역 어장 473개소(5,159 ha), 해수욕장 15개소, 양식어장 368개소(8,571 ha) 등이 직접적인 오염피해를 입었다[10].

#### 2. 통합 대책위 구성 갈등분석

##### 2.1 갈등의 개요

유류유출 사고 이후 태안군에는 수협을 비롯하여 자

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양한 조직이 우후죽순처럼 조직되었다. 그러나 개별적 대응에 따른 비용 상승, 대응력 약화, 조직간 대립과 분쟁의 격화 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조직 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놓고 단체 간 대립과 반목이 지속되면서 통합 논의는 난항을 거듭하게 된다.

2008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주민들의 통합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2월 하순 발기인 대회에 이어 4월 7일 단일 조직인 '태안군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가 창립되었다. 창립이후 단체 간 이해관계 충돌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합회 운영이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불만이 누적된다. 또한 최대 단체인 수협이 대부기관 선정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여 독자적인 행보를 하게 되자, 대책연합회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고원인에 대한 1심 선고, 시행령 제정, 방재비 지급지연과 삭감 등과 같은 주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책연합회가 별다른 대응을 못하게 되면서, 조직을 이탈한 수협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조직통합에 대한 군민들의 요구도 커져만 갔다.

표 4. 통합 구성 갈등의 주요 내용

일자	갈등의 주요 내용
12월 13일	2007년 12월 서산수협 피해지역 어촌계 포괄 '유류유출사고 피해대책위원회' 를 구성
1월 03일	지역 인사 중심으로 태안유류피해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김OO) 설립
1월 중순	8개 읍·면 비수산대책위원회 대표 비수산분야 유류피해대책위원회 구성
2월 초순	우후죽순의 대책위 통합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2월 05일	태안군의회에서 비수산, 수산분야 대책위원들이 모여 조직 통합 논의
2월 12일	연합대책위 발기인 대회 발기위원 문제로 무산
2월 19일	태안군의회 연합대책위 구성을 위한 조례안 가결
2월 23일	태안특별법 국회 통과
2월 29일	'태안군 해상 유류피해민 대책 연합회 발기인대회' 개최
3월 28일	'비수산분야 유류피해대책위원회' 사무실 열고 활동 시작
4월 07일	태안군 피해민들을 대표하는 '태안군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창립
4월 30일	수협, 별도의 '수협 통합유류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이OO)' 구성
6월	태안특별법시행령 제정(3일), 사고원인 1심 판결(23일), 통합에 대한 요구 재점화
7-9월	방재인건비 논란, 통합의 필요성 높아짐
11월	통합을 위한 세부 논의 시작

자료: [1]에서 인용.

통합 조직구성을 둘러싼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 수협통합유류피해대책위원회, 비수산 분야 유류피해대책위원회, 기타 주민단체, 태안군, 태안군의회 등이다. 그리고 통합조직 구성 갈등의 내용을 일자 순으로 정리하면, 위의 [표 4]와 같다.

## 2.2 갈등의 전개과정

### 2.2.1 사고 후 대책위 난립

유출사고 후 1주일 만인 12월 13일 수협대책위가 구성되어 주로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활동에 들어가자 각 지역별 주민대책위도 앞 다투어 구성되기 시작하였다. 숙박업과 요식업주들 역시 따로따로 대책위 구성을 서둘렀다. 특히 수산업분야 대책위원회에 속하지 못한 비수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혹시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까? 하는 의구심이 커지면서 앞 다투어 각종 분야에 걸쳐 작게는 10여명 안팎에서 많게는 수십 명에 이르는 회원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의 출범이 이어졌다. 이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구성된 대책위만 해도 2008년 1월에는 10여 개를 넘어섰고, 준비 중인 곳도 여러 곳이었다. 이 같은 대책위가 '난립'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불안감 때문이다. 저마다의 처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고, 이를 논의·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초조감과 소외감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이는 끝내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치닫는 양상을 보였고, 특히, 수산과 비수산 분야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 2.2.2 대책위 통합의 필요성

대책위가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고 대책위 간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조직 통합과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현재와 같이 '각개전투'를 치르듯 전개되고 있는 자구책 마련 수준의 주민대책위가 과연 향후 피해배상 및 보상 협상과정에서 효율적인 협상력과 체계적인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또한 지역별·업종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대책위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피해는 어느 단위에서 보호해 줄 것인가 하는 문

제도 있었다. 또한 대책위별로 지급하는 피해산정과 관련한 용역비용도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 범군민대책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우선은 소규모 대책위원회로는 민사소송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 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비롯한 각종 소송관련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소규모 대책위만으로는 삼성과 같은 거대 조직에 상대할 수 없으며, 분산된 대책위로는 각개격과 당할 수밖에 없으며,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장기전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규모 대책위원회가 피해보상과 관련한 업무를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끈기 있고 체계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이 같은 여론에 반영되었다. 실제로 군민 모두가 일일이 피해보상과 관련된 업무에 매진할 수 없다는 생각에 동조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 삼성 등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상대 조직과 효과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협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태안군민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2.2.3 통합을 위한 노력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약 한달 후인 1월 초순부터 '연합회 구성'에 대한 태안군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지역 언론에서도 '소규모 대책위'들이 난립하여 이후 피해보상 및 복구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되었다. 이런 요구에 따라 피해주민들은 연합대책위를 구성하기 위해 2월 5일 태안군의회에서 수산, 비수산 분야 대책위원 10여명이 긴급회의를 갖고 (가칭)태안군연합대책위원회 설립에 합의, 총 30여명의 발기위원의 구성에 합의를 하였으나 협의(안)를 내놓은 지 1주일 만에 발기위원 구성이 최초 명단과 다를 뿐만 아니라 타 지역민이 발기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점과 함께 밀실행정 의혹까지 제기되어 결국 무산됐다. 이로 인해 '연합회 구성'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월 12일 회의 무산에 대한 주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국회로부터 태안관련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연합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태안군의회는 2월 19일 ‘태안군 해상 유류 피해대책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해 연합 대책위 구성에 탄력을 불어넣었다. 이 조례에는 태안 앞 해상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태안군 피해지역 주민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연합활동, 해양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을 위해 해상 유류피해대책연합회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책위는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결국 2월 23일 국회에서 태안특별법이 통과 되면서 더 이상은 연합회 구성을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월 29일 연합회 발기인 대회가 개최되었다. 그 결과 태안군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의 위원장은 태안군의회 의 의장이 역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수산분야, 비수산 분야 위원 각 1인이 부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하였다.

#### 2.2.4 통합대책연합회 창립과 분열

4월 7일 태안군 피해주민을 대표하는 ‘태안군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가 우여곡절 끝에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태안유류투쟁위원회와 태안군선주연합회 등이 조직 구성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대책연합회가 창립되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연합대책위원회에 거는 기대는 매우 컸다. 우선 흩어진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하나로 모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치유해 주민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삼성과 정부를 대상으로 한 싸움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사무실 개소 한 달여 만인 지난 4월 하순, 수산분야 대책위가 정부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대위지급금과 관련한 금융기관선정에 있어 불만을 표출하고 대책연합회를 공식적으로 탈퇴하였다. 탈퇴한 수산대책위는 3개 수협(서산, 안면, 남면 수협)을 통합한 대책위를 구성하고 삼성을 상대로 자신들을 협상 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태안군선주연합회마저 내부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참여율이 저조해지면서 ‘연합회 해체설’이 감돌았다.

당시 연합대책위 탈퇴의사를 밝힌 수산분야 대책위는 “수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가장 많은 수협에서 어민들의 대부사업을 일괄 담당하는 것이 순리”라며 “어민들과 수협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연합회의 일방적인 대부 금융기관 선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들은 “연합회 사무국은 피해주민의 대부사업을 펼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상임위를 개최하지 않고 몇몇 임원들의 의사만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선정했다”며 “결과적으로 1개 금융기관이 선정될 시 지금까지 어민들의 피해보상과 배상을 위해 일해 온 수협을 끝내 제외시켰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수산분야 대책위는 “대책연합회가 뿔뿔이 갈라진 이유는 모든 의사결정이 민주적이지 않은 데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언제나 목소리가 큰 위원, 고집을 꺾지 않는 위원 등에 의해 모든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며 “몇몇 상임위원들에 의해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으로 결정된 의사가 결국 대책연합회의 붕괴를 초래했다.”고 조직 분열의 책임을 군의회와 비수산분야 위원의 탓으로 돌렸다.

수산분야의 이런 주장에 대해 대책연합회는 당시 보도 자료를 통해 “연합회 대부 금융기관 선정에 대한 공문을 접수하고 각 상임위 위원과 전화통화를 시도, 정부기관 및 각 사회단체 협의를 통해 농협과 수협을 공동으로 채택하게 됐다”며 “수협 측의 문제 제기로 인해 현재 태안군과 충남도에 연합회의 추천 의견을 보류한 상태로, 재협의를 수협에 요청했으나 수협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합회의 해체는 없다. 수협을 위한 연합회 운영도 있을 수 없다”며 “3개 수협이 탈퇴를 한다 해도 태안군 8개 읍·면 대책위와 전해민대책위, 선주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체위기를 부정하는 한편 “수협의 수익사업에 부응하지 못한다 하여 일방적 결정에 의한 탈퇴의사는 정당성과 타당성 등 명분도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수산분야의 탈퇴와 대책연합회 분열과 관련하여 일부 인사들은 “최초 피해발생시 수산, 비수산 분야를 갈라놓고 피해조사를 실시한 것 자체가 문제다. 국제기금이 보상할 수 있는 최대 보상금은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각 분야에선 다른 타 분야보다 많은 금액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 애를 쓸 것”이라며 “따라서 파이는 일정한 크기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나눠 먹을 사람이 많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모두가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피해주민 스스로가)양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2.2.5 재통합 요구와 노력

4월말 수협이 탈퇴하고, 선주연합회 등이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대책연합회는 사실상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와중에 5월말 그 동안 진행되었던 방제작업이 끝나게 되고, 6월 3일 태안특별법시행령이 통과되고, 6월 23일 유류유출 사고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방재비 지급이 지연되면서 태안주민들의 생존에 대한 위기감도 그 만큼 커져 갔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연합회가 아무런 대응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주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해갔고, 대책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탈퇴한 수협에 대한 비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삼성과 싸우고 정부를 압박하려면 군민이 모두 뭉쳐도 어려울 판에 수협이 자기 조합의 이익만을 고집하면서 조직을 이탈하고 개별 행동을 한다면 이런 행동이 과연 누구를 돕는 것이냐는 것이다. 일부 주민은 수협이 삼성 편인지 군민 편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냈다. 불만이 있으면 대책연합회에 들어가서 논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지, 조직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주민들은 수협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결국 주도권 싸움이고, 조합장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책연합회, 수협통합유류피해대책위원회, 태안유류피해대책투쟁위원회 등 모든 조직이 동의하고 있다. 또한 그 간의 경험을 통하여 각 단체의 성격이 다르고 구성원이 다른 만큼, 각 조직의 이해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수협으로서는 어민들의 이해와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수산은 비수산 나름대로 그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체 간의 이해차이가 아니라, 삼성

과 같은 더 큰 조직에 대한 공동대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통합의 필요성,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중요성과 함께 조직개편과 조직 운영방식이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지금 처럼 군의회의장이 대표를 맡아서는 군민의 이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렵고, 삼성 등에 대해 공세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수의 상임위원 중심으로 대책연합회가 운영되어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서로에 대해 쌓인 원망과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 간 화해를 위해 태안군이 조정자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대책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안군 역시 조직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통합에 도움이 된다면 예산을 포함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2008년 늦가을 대책연합회 통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 IV. 재난 갈등의 성격과 특징

### 1. 사고가 갈등의 근원

태안은 어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생활해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곳이다. 클 태(太), 편안할 안(安)이라는 명칭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풍부한 어장을 끼고 있고, 농경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 산물이 풍부하고 인심이 후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비교적 충직한 삶을 누리고 살았다. 태안군을 뒤흔들만한 갈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 태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갈등의 원점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그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을 뿐 아니라, 바다에 삶을 두고 누대를 거쳐 이곳에 터를 박고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기에 충분했다. 바다와 갯벌의 황폐화는 삶의 기반과 현장의 상실을 의미했고, 이는 곧 생존의 위기로 직결되었다. 이제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 2.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갈등 발생

사고 후 주민들의 분노와 원망은 하늘을 찔렀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원상회복, 그리고 배상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럽게 불뭉치럼 터져 나왔다. 이와 함께 당장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주민들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런 대비책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전혀 달라진 환경에서 살아갈 길을 모색해야만 하는 생존을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피해조사와 배상을 위한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처지를 격렬한 어투로 호소하기 시작했다. 남을 배려하고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이 당시 주민들의 목적은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자를 모두 처벌하고, 바다와 갯벌을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라는 것이었다.

## 3. 생존권 확보가 주요 이슈

태안사회 갈등의 시작은 유류유출 사고였으나, 태안 갈등의 기반은 변화된 환경에서 생존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것이었고, 삶의 안정적인 기반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런 열망과 욕구가 분출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지 못하게 되면서 방재비 지급과 관련한 갈등, 조직 구성을 둘러싼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었고, 개인 간, 주민 간, 조직간, 집단 간 다양한 종류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즉, 유류유출이라는 미증유 사태가 태안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사람들은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야 하면서 생존을 유지하고 삶의 안정성을 회복해야만 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확보하고 기회를 얻기 위하여 서로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생존을 위한 욕구,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는 지극히 본능적인 것이어서 채워지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었다.

## 4. 갈등의 성격은 이해 갈등

통합대책위 구성 관련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정의나

도덕성에 기반을 둔 가치갈등으로 볼 수 있으나, 갈등의 원인이 수협과 비수협, 혹은 수산과 비수산 분야 간의 조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갈등이며, 조직 분열의 핵심적인 원인도 대부사업 관할권 다툼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태안의 이해갈등의 성격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는 성격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일상에서의 이해갈등이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고, 이런 갈등은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태안의 경우, 극단적인 위기 속에서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갈등으로 갈등의 강도가 매우 강할 뿐 아니라 타협이나 조정의 여지가 매우 적었다는 점이다. 생계비 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분신을 시도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이 이런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 5. 구조적 원인으로 갈등 심화

그렇다고 태안 사회의 갈등을 주민간의 이해갈등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 정부가 1차 생계비 지원을 주민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지역에 따라 차등지급한 다음, 그 배분의 결정권한을 마을에 위임한 것은 결정적인 행정 오류였다. 또한 수협의 대책연합회 탈퇴 배경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대부기관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는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데에도 이유가 있다. 이렇게 태안 갈등의 이면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 부실 혹은 관계 법령의 부재와 같은 구조적인 원인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6. 갈등은 문제해결 과정이자 새로운 관계 형성

태안의 갈등은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부딪힘이다.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생존을 확보하고, 삶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에서 시작되었다. 아직 누구도 자신들의 생존에 대한 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이런 과정에서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태안주민들은 밀려오는 문제들과 부딪히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조

건과 한계, 그리고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갈등은 태안주민들을 성숙하게 바꿔놓았다. 함비온 뒤에 땅이 굳고, 열병을 앓고 난 후 몸이 가벼워지듯 태안 사람들은 갈등을 통해 이웃 역시 자신과 별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원래의 마음을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의 힘과 마음이 모여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평범한 지혜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 V. 결론 : 정책적 제언 및 함의

태안 지역 사회 내부의 갈등은 외부인에게 안타까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태안 사회는 갈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견하고 주변을 이해하고 협력과 상생의 필요성을 배워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가 없는 곳에는 해결도 있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태안 사회의 갈등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자 하는 태안 주민들의 몸부림이며, 태안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재난 갈등 사례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갈등극복을 위한 정책적 제언 내지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

다원화되고 다양화된 사회에서 생각과 이해의 차이는 당연한 것이고, 두려움 없이 이를 표출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사회에서 이슈가 생기면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를 억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갈등의 해결은 갈등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 2. 지방자치의 성숙은 갈등해결의 전제

태안지역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갈등 사례의 분석을 위한 인터뷰[11] 등을 진행하는 동안 발견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재난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의 근원에는 지방자치 선거과정에서 노정되었던 갈등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통합 조직 구성을 둘러싼 진통과 갈등의 저변에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지방정치 세력들 간의 양

금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방정치, 즉 지방자치의 성숙이 없고서는 재난으로 인한 갈등의 봉합 내지는 극복 또한 요원하다.

### 3.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태안에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또 많은 과제가 새로 생길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갈등 발생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갈등 발생의 첫 번째 원인은 참여로부터의 배제이다. 이해관계가 분명한 사안에서 배제를 눈감아줄 사람이나 조직은 없다. 따라서 참여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 필수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우선하는 사회에서 국가든 지방정부든 강압과 명령, 협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해관계가 구체적으로 걸려있는 문제에서 통치나 다스림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동등한 자격으로 수평적인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 4. 정보 공유와 사실관계 규명

이해관계자간 갈등의 주요 이슈는 사고원인규명, 피해 범위와 한계, 피해 대상의 선정, 배상 범위와 배상액 산정 등이다. 이런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 정보의 공개와 공유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보의 공유와 공개는 생산적인 토론의 기반이다. 또한 정보를 숨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런 행동이 갈등의 심화의 원인이 된다. 일부에게 선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갈등의 원인이 된다. 정보 공개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정보를 관계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아는 정보는 왜곡 가능성이 그 만큼 작아지기 마련이다.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으면 논쟁을 통해 해결하려 해서 안 된다. 말싸움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별로 없다.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으면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을 선택하여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판단을 해야 한다.

### 5. 상대의 생각과 가치 인정

갈등 상황에서 이해갈등은 거래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가치 차이는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논쟁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 또 거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논쟁하면 할수록 갈등은 심화될 가능성만 높아진다. 사상과 가치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저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이런 차이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갈등의 강도는 낮아질 수 있다.

## 6. 합의를 통한 결정

개인보다는 집단이, 자유보다는 통합과 일치가 강조되던 시대에는 개인의 개성이나 다양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의 가치는 모두 비슷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의 머리수였다. 이런 시대에는 의사결정도 지지하는 사람의 머리수가 많은 쪽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었다. 다수결은 해당 사안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자유가 중요하고 개성이 중요하고, 사람마다 삶의 모습과 선호가 달라졌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가 되었다. 개인을 집단 구성을 위한 세포로 여길 수 없다. 주어진 상황에서 사람마다 제각각 생각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선호가 다르다. 이런 세상에서는 다수결이 통하기 어렵다. 다수결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분란만 생긴다. 사람마다 제각각인데 어떤 한 가지 인자를 기준으로 사람을 갈라놓은 다음, 수가 많은 쪽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식의 결정방식을 사람들이 선호할리 없다. 의사결정에서 소외된 소수의 반발도 문제거니와, 이런 단순한 의사결정 방식은 참여한 개인에게 너무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는 다수결이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다.

다양한 다수가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나머지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짜장면 먹을 사람 손들어 봐!”가 아니라, 철수는 짜장, 민수는 짬뽕, 숙이는 우동이라면 동의를 수준은 “그럼 중국집으로 가면되겠네”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합의는 모든 것을 갈게 만들어 버리는 통일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하

는 것이다. 그 이외에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중국집이 합의 수준이라면 그곳에 가서 무엇을 먹든 그것은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되는 것이다.

## 7. 갈등해결의 전형 창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보고 배우는 것이다. 남이 만든 모범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가장 손쉽고 빠른 길은 바람직한 모범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시화호 관련 갈등을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해결하고 지역발전 계획을 합의를 통해 해결한 사례’[12][13], ‘고리1호기 연장 운전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과 지역주민이 합의를 이룬 사례’[14] 등은 새로운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

## 참고 문헌

- [1] 박태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이후 태안사회 갈등의 전개과정과 특징”, 2008 태안환경국제포럼 초청세미나 자료집-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태안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pp.151-174, 2008.
- [2] 양기근, 박태순, “재난이후 지방정부의 갈등의 전개과정과 특징-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사례 중심으로”, 2008 부산경남지방자치학회 ·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세미나 자료집-지방정부의 경쟁력과 협력체제 구축, pp.33-53, 2009.
- [3] 박재환, *사회갈등과 이데올로기*, 나남, 1992.
- [4] 정건화, “사회갈등과 사회과학적 갈등분석”, *동향과 전망*, 제71호, pp.11-47, 2007.
- [5] 나태준,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p.10, 2004.
- [6] Yin, Robert K. *Case Study Research*,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2003.
- [7] 장현주, “공공갈등의 원인과 이해관계 분석-문화재관람료 징수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2권, 제3호, pp.29-54, 2008.

- [8]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갈등관리 현황과 과제*, 2004.
- [9] 소방방재청, *2007 재난연감*, 2008.
- [10] 신승용, “해양기름유출과 위기관리-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례연구”, *국가종합위기관리 (정지범 편저)*, 법문사, pp.641-642, 2009.
- [11] 양기근, *태안지역 주민 인터뷰 자료*, 인터뷰일자, 2008. 12. 24.
- [12] 박태순, *사회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법정기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사회갈등연구소, 2008.
- [13] 박태순, *대립과 갈등을 넘어 사회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희망보고서*, 한국행정학회, 2007.
- [14] 박태순, *고리1호기 갈등,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다*, 사회갈등연구소, 2008.

**저 자 소 개**

**박 태 순(Tae-Soon Park)**

정회원



- 1988년 8월 : 서울대학교 분자생물학(학사)
  - 1994년 2월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정책학(행정학석사)
  - 1997년 8월 : 서울대학교 자연대학 행동학(이학 박사)
  - 2002년 7월 ~ 2004년 5월 :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행동학(박사후 과정)
  - 현재 :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 <관심분야> : 갈등관리, 사회통합, 재난관리

**양 기 근(Gi-Geun Yang)**

정회원



- 1993년 2월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정치학학사)
  - 2000년 2월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2004년 8월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재난관리, 소방정책, 정책 평가 및 분석